

# 소련 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安澤源\*

##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스탈린주의와 소련 공산주의                |
| II. 소련 공산주의의 지속성에<br>관한 예비적 고찰 | V. 스탈린 이후 고르바초프 이전<br>까지의 소련 공산주의 |
| III. 레닌주의와 소련 공산주의             | VI. 고르바초프하의 소련 공산주의               |

## I. 머리말

하나의 거대한 변혁의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기본 동인은 고르바초프의 혁명적 인식전환에 바탕한 빠레스트로이카, 그에 따른 동유럽체제 및 동·서관계의 재편, 그리고 20세기 후반들어 냉전구조의 구각속에서 짹는 새로운 지구적 요소의 증대이다. 인구폭발, 환경파괴, 오염, 제3세계에서의 기근의 만연, 편협한 주권국가들의 이기주의, 핵전쟁의 절멸적 위협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이념적 해체모니 쟁탈을 위한 동·서냉전 가운데의 군비경쟁이 기존체제의 쇠잔과 탈이태울로기를 이끈 주요요인이다. 체제내에서 짹는 이같은 자기부정적 요소들과 함께 새로운 구조변화를 요구하는 측면 역시 함께 태동하고 있다. 과학·기술혁명(STR), 통신과 교통의 증대, 국제적 역학구조내에서 「힘」의 개념의 변화—경제적 비중의 상대적 증대—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간 상호의존과 협력의 중요성 증대 등이 그것이다. 이념적 팍스 로씨아나(Pax Rossiana)가 현실적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kana)와 충돌하면서 패권적 군비경쟁이 지속되었고 이에 의해 바로 그것을 가능케한 기존체제의 경제적 기초가 위협받거나 허물어지게 되었다.

소련의 경우 경제문제는 80년대 들면서 심각하게 되었고 그 해결의 지연은 소련체제 자체는 물론 고르바초프를 포함한 노멘클라투라 자신들의 입지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칼」보다는 「보습」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教授

커지기 시작했고, 이윽고 빼레스트로이카가 배태되었다. 그것이 초래한 팔목 한만한 소련 국내외적 영향에 대해 세심스러이 거론할 필요는 없다. 충분한 것은 현재 일고 있는 동유럽내에서의 공산당소멸, 민주화·다원화의 진전, 독일통일, 나토와 바르샤바기구의 대치구조의 종식과 재편움직임, 동·서 관계면에서의 탈이념화와 신데팡트, 공존과 협력욕구의 증대 및 경제침체력에 바탕한 아·태지역의 지위상승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족하다. 유럽공동체(E.C)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블럭의 탄생조짐 역시 그 하나이다. 그러나 대외정책면에서의 이같은 변화와는 달리 빼레스트로이카가 갖는 국내적 의미는 그 현실성에 의해 배반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화, 시장화, 자율화의 높은 이상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멈추어 미동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인민의 최소적 소비재 욕구충족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었다. 빼레스트로이카는 과연 혁명인가? 이같은 질문은 소련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단의 사람들은 빼레스트로이카가 갖는 혁신성에 매료되어 그것을 기존철학과 제도로부터의 단절노력이라 평가한다. 또 다른 일단의 사람들은 빼레스트로이카가 갖는 대의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와 현실적 모순·좌절감에 비중을 두어 개혁과 관련한 불가피한 역사·제도·이념적 유산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자는 소련 공산주의의 지속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며 후자는 오히려 빼레스트로이카가 갖는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미치는 과거적 영향의 지속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빼레스트로이카가 「새로운思考」에 바탕한 혁명적 인식의 전환임을 고려할 때 최근의 소련 공산주의에는 지속보다는 변화의 측면이 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혁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닌주의 테두리 내에서 뻥뻥 들고있고 관료주의적 야합, 시장경제에 대한 몫이해, 민족분리주의에 대한 중앙적 탄압 등은 어느모로 보나 개혁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소련체제 특유의 역사·제도적 유산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음을 보여 준다. 마르크스는 일찌기 「인간은 주어진 환경속에서 역사를 창조한다」고 했다(Marx, 1986:97). 이 점에서 볼 때 소련 공산주의가 어느 면에서 제정러시아적 역사 유산의 연장이듯이 현대 소련의 변화 역시 그것이 처한 역사·환경적 유산가운데서 성장·결실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해 있다. 본고는 이같은 관점

하에 현대소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소련 공산주의의 대두와 성장이라는 지속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Ⅱ. 소련 공산주의의 지속성에 관한 예비적 고찰

소련 공산주의의 역사적 고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몇 가지 논쟁이 있어 왔다. 첫째는, 소련 공산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연장으로 파악하면서 소련 공산주의 발달사를 그 지속과 일탈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점이다. 둘째는, 공산주의의 태동 및 확산에 따른 민족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소련 공산주의를 그것이 배태된 역사·제도·환경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70년대 이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소련 공산주의의 성립과 관련한 외부충격과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념적 연관성을 부인치는 않을지라도 대체적으로는 오히려 민족적 특수성이라는 후자의 시각에 더 큰 강조점을 두는 식으로 합일되어 갔다(Keep, 1976; Auty, 1970).

그러나 공산권 특히 소련의 현재와 역사간의 연속성에 대한 이같은 합의는 최근들어 새로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련 공산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이념이나 역사적 유산의 연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먼저 이데올로기적 결정론(ideological determinism)이나 역사 결정론(historical determinism)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첫번째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또한 소련 공산주의를 그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계론적으로 흐른 나머지 냉전요소적인 사악성과 연결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소련체제와 그 역사유산간의 유기적 관련성과 관련하여, 옛것은(또한 옛이념은) 새로운 것의 덮개 속에 생생히 살아 남아 있다는, 소련 공산주의의 변화는 단지 외형적인 현상일 뿐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원죄적 속명론에 빠져 들게 됐다는 것이다. 소련체제의 해악적 특성들이 여례 면에서 옛 역사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상투적 규정은 분명히 맥빠진 반공주의적 신조와 끌려서 아적이고 심지어는 反슬라브적인 혐오감을 재생시키고자 애쓰는 사고 방식의 대용물이 되어 온것도 사실이다(가이어, 1970:17). 그 같은 사고방식의 이면에는 소련체제의 역사적 유산 속에서 소련의 미래적 희망보다는 그 비극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 공산주의를 논하면서 그것에 미친 前史라든가 마르크스-레닌주

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배제하는 일도 온당한 것이 아니다. 소련의 현재 속에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정치적 규범은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내에 머물고 있다. 소련인의 생활방식을 혁명전후의 그들 선배들의 그것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듯이 뼈마트로이카의 운동이 면에는 아직도 여전히 비잔티움적, 동유럽적, 그리고 레닌주의적 정신 요소가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이점을 놓고 볼 때 소련 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를 논하는 우리의 입장은 어느 일방적 주장에 집착하기보다는 소련 공산주의의 성립·발전과정을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대화·산업화라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러시아 혁명은 근대화·산업화라는 서구적 충격속에 제정러시아의 질곡을 탈피코자 한 투쟁의 몸부림이었으며, 그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평등과 인간해방을 가치로 한 마르크스적 외피였다. 그러나 레닌혁명으로 성립된 새로운 정치기반은 여타 모든 혁명이 그러하듯이 러시아의 전래적인 정치·사회적 특성들에 의해 고유한 형태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 와중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레닌적 일탈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다시 오늘날까지 심각한 암영을 드리우고 있는 스탈린적 퇴락을 초래케 된 것이다. 이점에서 볼 때 오늘날 고르바초프의 대개혁운동은 스탈린적 왜곡으로부터 본래적 의미로서의 서구화·현대화에로의 복원노력이며, 이 과정에서 소련의 前史·제도적 유산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 III. 레닌주의와 소련 공산주의

1917년 10월 혁명에 의한 소련 공산주의 수립과 관련한 레닌주의 공적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되는 것이다. 첫째로는 성숙된 자본주의 즉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을 전제로 사회주의론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이론을 낙후된 후진농업사회인 러시아에 창조적으로 적용시켰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혁명은 프롤레타리아의 수가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선진산업국가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1917년 혁명직전 러시아에서의 노동자수는 인구의 겨우 5%에 불과했다. 그나마 그들마저 조직화·의식화되어 있지 못하였으므로 자생적 혁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이점에서 레닌의 여타 두가지 공적이 지적된다. 즉, 레닌은 이같은 소수의 산업노동자를 군대조직의 엄격한 전위당

개념으로 묶어 세움으로써 짜르정부에 의한 경제주의적 또는 조합주의적 배수공작을 차단시키는 동시에, 마르크스에 의한 혁명의 자생성(spontaneity)을 직업혁명가를 중심으로 한 의도적 또는 계획된(planned) 혁명단으로 변모시켰다. 노동자의 수가 적고 의식화되어 있지 못하는 한 혁명은 보다 선진적이고 의식화된 혁명가로 구성된 전위당에 의해 지도되지 않으면 안된다. 레닌주의 전략의 핵심개념 가운데 하나였던 「노동자·농민동맹」 역시 산업노동자가 처한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수적으로나 권력기반 면에서 취약한 볼셰비키 전위당에 의해 권력을 쟁취할 수 밖에 없는 필요상 폭력혁명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낙후된 농업사회에서 생산력의 저발전 단계에 머물렀던 러시아에서의 혁명은 마르크스가 그토록 강조했던 혁명의 사회·경제적 전제들로부터 정치적 전제조건(혁명상황)의 우위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이점이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레닌주의적 일탈의 근원이었고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확대재생산되어 스탈린에 의해 고착화되었다. 마르크스적 이상과 러시아가 처한 특수성간의 이같은 괴리는 혁명의 주도자인 레닌과 볼셰비키에게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제기하였다. 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마르크스적 원칙과 상반된 것인 한편,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레닌은 마르크스의 사회혁명관을 다음의 몇 가지 결정적인 측면에서 변형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첫째는, 혁명의 사회·경제적 전제들(고도의 경제발전과 노동자계급 인구의 다수화)대신에 특정 정치상황(혁명상황)과 그 가능성을 내세웠다. 노동자계급의 사회혁명은 당지도하의 정치혁명으로 대치되었으며, 이는 혁명성공의 핵심요인으로 레닌의 주요 공적으로 남게 되었다. 둘째는, 러시아에서의 독자적 혁명의 불가피성을 해명키 위한 수단으로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과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혁명이 모든 산업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일국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세번째는 체제의 평화적 이행과 반대로 폭력혁명과 내전을 사회주의 혁명의 결정적 수단으로 주장하였다(레온하르트, 1987:91).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이같은 일탈은 사회·권력구조의 상정과 창출과정에도 불가피한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비록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 농촌과 도시, 정신과 육체 노동간의 대립적 잔재는 남아 있으나 다수의 노동자가 소수의 부르조아지를 지배하는 관계상 국가의 강제장치가 최소한으로 축소

된 준국가(semi-state) 상태로 표현됐다. 그것은 사회혁명이 노동자계급이 다수를 점하는 상태를 가정한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노동자가 턱없이 소수인 러시아적 상황에서 전위당 개념으로 출발한 레닌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부르조아지를 전복하고 그들의 반혁명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강제력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지배로 되었다(Lenin, 1960-1966:69).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임과 동시에 「억압자, 착취자, 자본가에 대한 자유의 제한」을 의미한다(Lenin, 1929:193). 레닌은 10월 혁명후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이라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강제력과 독재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 정권을 전복하려는 「착취자의 저항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없이 자본주의를 폐퇴시키고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Lenin, 1960-1966:316). 따라서 레닌혁명에 의한 볼셰비키 정권의 수립은 그 자체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이었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창출은 볼셰비키 정권의 공고화와 일치하게 되었다. 볼셰비키 정권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일치화됨에 따라 그것은 사회권력을 독점한 채 정치적 위계질서의 경계에 놓이게 됐으며 경쟁적 분파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초기의 높은 이상으로 출발했던 당내 「민주집중제」의 원리마저 퇴색시켰다.

이점이 가장 극명히 드러난 것은 혁명과정에서 「제헌의회」와 「소비에트」에 대한 볼셰비키 당의 태도에서였다. 볼셰비키들은 1917년 11월, 혁명을 승리로 이끈 몇 주 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자신들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제헌의회 선거에서 실질적인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의석분포면에서 볼셰비키 당은 야당의 위치로 밀리게 되었으며 새로 구성될 정부 역시 비볼셰비키파들이 장악하게 될 터였다. 애초 레닌이 임시정부의 면전에서 제헌의회의 소집을 주장했던 것은 언젠가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임시정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전술적 기교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의회제도에 대해 대중이 갖고 있던 열망을 자신에게 끌어 모으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어쨌든 레닌은 원치 않았던 결과에 직면해 제헌의회가 대중의 진정한 열망(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영치 못했다는 이유로 간단히 이를 해선했다.

10월혁명의 산물로서 레닌 자신이 옹호했던 소비에트식 민주주의 역시 매

한가지 운명이었다. 그것은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한 직후 소멸돼 버렸기 때문이다. 1917년 2월 혁명 직후 짜르가 퇴원한 뒤 리시아 권력구조 내에는 정부와 대중사이의 전통적 간극의 재현이라 볼 수 있는 기묘한 대결상황이 벌어졌다. 한편에는 부르조아 의회주의의 대변기구인 「두마」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는 대중적 혁명기구인 노동자·병사 소비에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두마와 소비에트간의 지루한 협상끝에 태어난 사생아였다. 혁명과정에서 볼셰비키의 일차적 타도대상은 당연히 부르조아 임시정부였다. 그것은 소비에트의 승리를 의미했다. 따라서 레닌은 「4월 테제」에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고 외치며 부르조아 정부의 타도를 외쳤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타도된 뒤 소비에트의 운명은 어찌 됐는가. 엄밀히 말해 볼셰비키 당내에는 소비에트에 대해 보다 민주적인 분파세력이 존재해 있었다. 카메네프와 지노비예프 등 이들 세력은 소비에트가 하나의 당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 그들은 소비에트가 여러 정당들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레닌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했으며, 이는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자신의 볼셰비키 독재를 뜻했다. 반혁명의 폐거리들이 거리로 내몰려 지면서 소비에트는 볼셰비키의 단순한 하수인으로 변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혁명의 초창기에 당은 이미 소비에트 위에 군림하게 되었으며, 유토피아적인 소비에트 기능의 목적은 볼셰비키 독재의 현실속에 매몰되어 갔던 것이다(가이어, 1970: 6장, 7장).

경제적 측면에서의 레닌주의 정책은 어떠했는가.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마련을 위한 볼셰비키 당의 초기 조치는 비교적 온전한 것이었다. 첫 번째 조치는 선별적 국유화, 평등성에 입각한 국유화된 토지의 재분배 및 자발성에 입각한 「노동자통제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쟁의 와중에서 괴弊해진 경제를 더욱 황폐화시켰다. 이같은 혼란에 직면해서 레닌은 그가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른 것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독일의 전시경제체제와 신경제정책을 합친 온전한 통제체제였다. 그러나 내란이 시작된 1918년 여름에 이르러 「국가자본주의」는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전시공산주의」라는 극단적인 국가통제가 그 결과로 나타났다. 국유화와 정부의 경제통제가 전반적 현상이 되면서 국가독점거래와 관료장치의 확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러나 1921년 초에 이르러 전시경제체제 역시 리시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시킨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내란이 끝나감에 따라 극단적 조치들에 대한 정당성이 사라져간 한편 전시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신경제정책은 7년 계획으로 1921년 3월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자유주의적으로 되어 감에 따라 경제와 제도간의 기묘한 관계가 설정되어 갔다. 즉 경제가 자유화됨에 따라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이 강화되어 갔으며, 당내 파벌이 금지되는 와중에서 당은 점차 단일구조(monolith)로 화해갔다(맥렐런, 1986:8장). 정치의 단일구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역시 이후 단일구조화 됨은 이로부터 이미 예견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

#### IV. 스탈린주의와 소련 공산주의

1924년 1월 레닌이 죽으면서 그의 생전에 이미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스탈린에 의한 당독점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레닌의 계승자」로서의 스탈린은 오랜동안의 전쟁과 내전, 기근, 약탈 등으로 도탄에 빠진 인민경제를 자본주의포위 속에 급속히 복구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안으로는 트로츠키와 부하린 등 정적들과 싸우면서 사회주의적 물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상 스탈린은 인민들에게 철의 훈련과 규율을 요하는 포위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위해 「격화된 계급투쟁」과 「자본주의의 포위」를 의도적으로 주장하였다. 스탈린체제가 본격화된 1928년 중앙위원회는 급속한 경제개발을 위해 최초의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열띤 경제논쟁을 벌렸다. 이 논쟁의 한쪽은 부하린이 주요인물로서 신경제정책의 원칙에 소련의 경제발전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한쪽인 스탈린은 산업(중공업) 생산의 증대에 절대적 우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맥렐런, 1986:187).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전제인 생산력의 일정수준에의 도달은 산업생산의 증대에 의존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논리였다. 결과는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종속이었고, 그것을 효율화하기 위해 농업집단화가 처참하리만치 혹독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쿨라크(kulak: 富農)가 집단화의 적으로 규정되면서 쿨라크라는 딱지는 계급적 성분에 상관없이 곡물인도를 거부하거나 「콜호즈에 참가하지 않는 모든 무리」로 확대되었다. 이와중에서 소비에트자료에 의하더라도 500만에서 1,000만정도의 농

민이 희생되었다(호스킹, 1988:167). 스탈린의 권력 독점과 사회의 단일구조화는 체제변혁에 대한 저항세력분쇄를 위한 억압·테러기구의 발전과 상호 작용하면서 소비에트사회를 거대한 관료적 전체주의로 변질시켰다. 사회주의를 위한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은 당내의 정적에 대한 숙정과 그를 통한 권력독점화와 동일시 되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당의 지도적 역할」로 탈바꿈되면서 시작된 대숙정은 지식인, 당, 국가 및 경제관료, 그리고 장교 단의 70%이상을 포함한 800만여의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레온하르트, 1987: 126). 관료체계가 강화되면서 마르크스적 평등관은 공공연한 차별화로 바꾸어졌으며, 공산주의하에서도 지도적인 사람들과 단순한 인민들간에는 사회적 구분이 존재한다는 계급적 공산사회의 개념이 주창되었다. 숙정과 체포를 사회주의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계급투쟁의 격화로 설명한 스탈린은 관료적 테러와 권력기구의 실존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국가소멸론을 「국가의 강화」라는 새로운 명제로 대체했다. 국가는 공산주의하에서도 계속 존재한다는 말이다.

사회주의의 건설과 관련하여 스탈린은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의 개념을 뒤집는 식으로 사용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마르크스는 고도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사회혁명의 전제로 간주한 반면, 스탈린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경제적 조건은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같은 사회주의 건설은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 일어나는 관계상 압제가 정당화 될 수 밖에 없었다. 군대나 여타의 억압기구들이 내전기간만큼이나 건설의 시기인 현재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억압기구없이 독재적 건설작업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우기 혁명은 오직 일국에서만 성공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혁명의 성공이 소련이라는 일국에서 논의되면서 마르크스와 레닌이 설정했던 각국 노동자 정당간의 평등성은 실제적 및 공식적 교리의 모든 측면에서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소비에트공화국에 대한 완벽한 복종으로 대체되었다.

사회주의의 건설은 또한 미래의 공산주의적 무계급사회에로의 이행과 관련해서 당의 절대적인 지도와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레닌에 이르러 이미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며 엄격하게 훈련된 엘리트조직으로서의 전위당개념의 소비에트 당은 스탈린에 이르러서는 이제 군대의 위계조직과 동일시되었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마르크스적 당의 개념은 노동자계급, 나아가서는

그 선진분자들인 공산주의자들(communists)의 운동을 지도하고 그 大義를 대변하여 싸우는 부차적 의미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당은 부분적으로는 레닌하에서 그리고 스탈린하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노동자계급과 동의어로 변질되었다. 노동자 계급의 大義가 당의 무오류성(infallibility)으로 전환되면서 당의 결정에 대한 개인적 복종과 충성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충성」으로 간주되었다. 당과 그와 연관된 관료제를 노동자계급과 동일시한 결과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시 지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로 변모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한 이같은 모든 논리의 전환의 결과 무계급의 공산주의사회라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전반적 재해석이 불가피하게 대두되었다. 단계적으로 이 목적의 성취는 계속해서 연기되었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간의 단계구분 및 그 내용들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로 나타나게 되었다. 스탈린은 사회주의를 국가소유에 바탕한 사회질서로 정의하였다. 그속에서 인민들은 각자의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될 것이며, 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도받고 명령받게 될 것이다. 사회변혁관의 중심적 특징이었던 「국가의 소멸」은 레닌에 의해 먼 훗날의 일로 미루어 졌고, 그것은 이어 스탈린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의 강화」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결사체에 토대하고 있는 사회이며, 생산물들의 분배가 「각자의 필요에 따른」 원칙에 의거하여 행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부가 증대된 사회이며,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남녀간의 성차별 등이 사라지고 노예적 분업이 철폐된 결과 인간성이 자유롭게 발전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바뀌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의 핵심적 특징이었던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결사체는 더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스탈린은 그대신 모든 생산을 지시하고 포괄하는 중심권력을 얘기했다. 국가는 이제 사회주의하에서도 존재한다고 주장되었다.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격차해소에 대해서는 오직 본질적인 격차만이 소멸될 것이며 다른 것들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무계급사회대신에 한편으로는 지도자와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공산주의하에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레닌에 의해 이미 타락의 길로 접어 들고 있던 민주집중제가 관료적 중앙집권주의로 변질돼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스탈린주의에 나타난 소련 공산주의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1930년대 중반까지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나타난 실천면과 관련하여 스탈린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교리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주요 수정을 가했다: 일국사회주의론, 즉 부농계급의 파괴를 포함한 집단화에 의한 농업의 산업에 대한 전면적 종속, 마르크스 평등이념의 포기,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절대적 우위, 국가소멸이 아닌 그 강화를 초래한 「자본주의의 포위」와 「계급투쟁의 격화」 등이 그것이다.

둘째로, 사회주의 단계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엘리트의 독점적인 권위에 대한 노동자계급과 대중의 완전한 복종, 그 엘리트에 의해 장악된 당기구를 행정기구와 국가 집행기구와 완전히 동일시 하는것, 그 자체의 극도의 중앙집중화로 변질되었다.

셋째, 미래의 무계급사회(공산주의)와 관련된 핵심개념들, 즉 계급과 국가의 소멸,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결사체, 도시와 농촌간 격차의 제거, 공동체적 부의 달성을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의 실현, 인간성 해방의 전제로서의 직업과 활동영역의 자유로운 선택 및 분업의 폐기 등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대신 공산당에 의해 지도되는 자의적 결정기준이 앞날의 사회에 대한 비전을 대체하게 되었다(레온하르트, 1987:3장). 1956년 프리드리히(C.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 Brzezinski)가 말한 「전체주의」 사회가 애초의 이상을 대신해 공고히 성립되었던 것이다(Friedrich & Brzezinski, 1956).

## V. 스탈린 이후 고르바초프 이전까지의 소련 공산주의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당내 지도층의 권력투쟁이 표면화되었다. 스탈린 사망직후 말렌코프와 베리아가 당과 정부 등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듯 보였으나 1953년 3월 21일 흐루시쵸프가 당 제 1 서기에 선출되면서 말렌코프와 흐루시쵸프간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졌다. 1953년 7월에는 베리아가 내무성을 당과 정부의 위에 놓은 죄목으로 체포되어 6개월 뒤 처형되었다. 베리아의 숙청과 함께 말렌코프와 흐루시쵸프를 중심으로 한 지도층 내부의 정책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과거 스탈린에 의해 저질러졌던 가장 큰 해악 가운데 하나인 강제 노동수용소로부터 죄수가 부분적으로 석방되었다. 내무성 산하의 特別局(Special Board)이 폐지되었고 스탈린과

관련됐던 주요 인사들이 인민의 적으로 규정되는 한편 정치범의 정의가 대폭 축소되었다. 강제노동수용소로부터의 죄수석방은 말렌코프와 흐루시쵸프, 관련 정치국 간부들간의 열띤 논쟁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것은 강제노동수용소의 비리와 죄악에 적·간접적으로 연계된 당간부들이 혼존하는 상황에서 죄수를 석방한다는 것은 풀려난 죄수들에 의해 당간부들의 비리가 드러날 위협이 크기 때문이었다(호스킹, 1988:330-331).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전환은 소비자 우선정책이었다. 소비가 인하, 소비재 생산증대, 주택보급의 확대, 식당시설 개선, 노동자 불만해소 등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다른 중요한 정책전환은 대외적인 평화공존이다. 1953년 7월 27일의 한국전쟁에서의 휴전은 이 같은 평화공존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위의 소비자 우선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은 흐루시쵸프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수상을 맡았던 말렌코프가 주도한 것이었다. 말렌코프는 당시까지 소련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인 「두 진영이론」(two camp theory: 세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간의 투쟁의 场이라는 이론)으로부터의 탈피를 옹호하고 나서는 등 동·서관계의 적대감 해소에 주력했다. 이에 대해 흐루시쵸프는 농업정책에 더 큰 강조점을 두었다(Hough & Fainsod, 1979:204-209). 그는 소련혁명 후 처음으로 곡물생산량과 가축수를 대중에 공표했으며 산출량 증대를 위해 곡물수매가를 인상하거나 자본투자를 증대하는 한편 행정통제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농업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폭넓은 정책을 꾀 나갔다. 대표적 농업개혁정책으로서는 곡물수확량 증대를 위한 쳐녀지 개발계획의 실시를 들 수 있다. 1953년 흐루시쵸프는 홍작으로 인해 곡물수확량이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카자흐스탄 북부, 서시베리아, 북부 코카서스 및 여타 동부지역의 쳐녀지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계획은 1956년까지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쳐녀지의 비옥도가 감소, 거주지역 등 하부구조의 미비, 농업장비 부족 등으로 결국 실패에 그치고 말았다.

말렌코프와 흐루시쵸프간의 이 같은 정책전환과 관련하여 1954년 말부터 1956년초에 이르는 사이 정책기조를 둘러싼 양자간 경제논쟁이 한층 가열되었다. 한편에 있어서 말렌코프는 소비재부문의 확대와 대외적 평화공존을 주장한 반면, 흐루시쵸프는 이와 반대로 중공업에 우선을 두고 군비증강을 꾀하는 한편 농업개혁과 탈스탈린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양자간의 논쟁은 흐루시초프가 軍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기 유리한 국방우선과 중공업 우선정책을 폐는 한편 농업개혁과 탈스탈린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온전개혁파의 지지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흐루시초프는 말렌코프를 제치고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권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그는 1956년 제20차 당대회를 계기로 지역공화국 제1서기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대폭 경질했다.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3분의 2가 흐루시초프 측근들로 대치되었다.

56년 당대회의 특징은 스탈린비판에 의한 탈스탈린 정책과 평화공존노선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를 정책은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의 태도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56년의 폴란드와헝가리사태가 그것이다. 동구사태의 진전을 흐루시초프에 대한 政敵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말렌코프는 흐루시초프의 정책이 소련을 위기속에 몰아 넣는 것이라 공격했다. 정적들에 의한 비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흐루시초프는 하나의 충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1957년 2월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그는 중앙의 산업담당성들을 해체하고 그 기능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소브나로호즈(COBHAPOXOZ)로 불리우는 지역경제위원회들의 설치는 어느면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제거작업의 일환이었다. 많은 수의 중앙관료들이 102개의 소브나로호즈들로 쫓겨 보내졌으며 중앙부처의 책임 역시 대폭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소브나로호즈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의 존적 구습에 매달리는 한편 관료들의 저항등에 의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Goldman, 1987:48-50). 흐루시초프의 경제개혁은 폭넓은 정치, 사회개혁의 열망으로 추진되었다. 이점은 1961년 22차 당대회에 제출된 당강령에 극명히 요약된다. 기본경제는 레닌주의에로의 복귀하였다. 신강령은 국가의 행정업무는 물론 경제, 문화적 발전업무, 정부기구개혁,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적 통제 등의 과제들을 실천함에 있어 인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했다. 강령은 또한 소련은 이미 사회주의 건설을 완료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노동과는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들어섰다고 공표했다. 1980년까지 소련에는 공산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령은 못박았다. 이 단계로 점근함에 따라 각 국가권력기관은 점차 시민의 자치행정기관으로 변모해 갈 것이라 내다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루시초프는 이 단계를 주도하는 것은 마땅히 黨이어야 한다

고 생각했고 강령 역시 소련 사회를 이끌고 지도하는 힘으로서의 공산당이 가지는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제고시킬 것을 명시했다. 이점에서 흐루시초프는 레닌의 모순된 양면성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었다. 무엇보다 「당」이란 개념과 「인민」이란 개념을 동일시하려던 경향이 그것이요, 민주적 방식을 되뇌이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그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모습도 그러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정책과 관련한 흐루시초프의 제반노력은 그 진지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내재된 단순성과 구조적 모순등에 의해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개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흐루시초프는 말썽장이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반대세력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957년 6월 정치들에 의한 첫번째 음모가 실패로 끝난뒤, 1964년 10월 수슬로프를 중심으로한 일단의 동료들에 의해 중앙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이자리에서 흐루시초프에 대한 비난투성이의 보고서가 낭독된 뒤, 그는 정치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흐루시초프가 물러난 60년대 중반이후 소련의 경제는 점차 악화의 길로 접어 들고 있었다. 기울어져 가는 경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지도층의 개혁노력 역시 일충 강화되었다. 1964년 5월 흐루시초프가 축출되기 5개월 전 리베르만등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생산의 질적 목표강조, 기업의 실적평가를 이윤판매실적·자본회임율 등에 의해 결정케 하는등 의욕적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관료주의·집중주의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흐루시초프의 실각과 함께 리베르만계획을 이어받아 확대실시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맛본 코시긴은 또다른 색다른 실험을 했다. 1967년 10월 툴라(Tula)市에 있는 쥬체키노(Shchekino) 화학공장실험이 그것이다. 이 공장은 애초 노동력을 두배로 늘리고자 시도했으나 코시긴은 반대로 노동력을 오히려 반으로 줄였다. 대신 노동력절감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분의 반을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사용토록 허가했다. 결과는 초기 몇년간은 대성공이었으나 이전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관료적 저항과 기업간 임금격차에 따른 노동자들 내부의 반발등으로 실패로 끝났다. 60년대 중반부터 정치국의 경제 및 산업 담당 서기로 일하면서 흐루시초프 실각후 브레즈네프와 권력투쟁에 나섰던 코시긴은 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경제가 계속 침체에 빠지자 1971년 중앙위원회 총회석상에서 브레즈네프에 의한 집중공격을 받은 뒤 개혁의 실패를 책임지고 실권을 브레즈네프에게 내놓았다. 1인자가 된 브레즈네프는 곧바

로 미국과 테 땅트시대를 열어 서방의 기술, 자본의 유치에 의해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면에서 소련이 비록 서방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여 무역증대를 꾀하기는 했으나, 서방의 對소 기술이전이 기울어져 가는 소련의 경제와 군사능력체고에 도움만 줄 뿐이라는 서방측의 의구심에 의해 테 땅트는 매우 단기로 끝나고 말았다.

1974년 12월 미의회가 잭슨—베니수정안(Jackson-Vanik Amendment)을 통과시켜 서방의 對소 기술이전의 전제조건으로 소련내 유대인의 서방이주를 자유롭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계기로 사실상 테 땅트가 끝나고 만 것이다. 동·서 관계는 이후 76년 양골라사태, 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사건을 계기로 악화되어 테 땅트는 동·서간의 경제전쟁(economic war)적 성격으로 치달았으며, 이같은 상황은 83년 9월 1일 KAL기 격추사건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이와중에서 동·서간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70년대 후반 이래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경제침체의 한 주요원인이 되었다. 70년대 초반의 테 땅트가 서방측에 의해 거부된 배경에는 브레즈네프의 2중적 대외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놓여 있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동·서관계는 본질면에서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와 계급간 관계(interclass relations)로 나누어 진다. 정부간 관계는 협상가능한 이슈(negotiable issue)로서 과학·기술교류를 포함한 경제관계에 촛집이 맞추어 진다. 계급간 관계는 역사발전의 필연적 결과인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실현을 담보하는 장기적 세력관계(correlation of forces)의 자기실현과정의 주요 규정요소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이슈(unnegotiable issue)이다. 제 3 세계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다(Arbatov, 1979:51). 브레즈네프의 이같은 이중기준론(dual standard theory)은 한편으로는 과학, 기술혁명(STR)의 시대에 있어서 서방, 특히 미국이 지닌 과학, 기술면의 놀라운 잠재력을 인정하여 교류를 응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관계를 여전한 이념적 적대관계로 규정하여 테 땅트나 교류실현을 사회주의의 실현과정의 한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이중기준론은 서방측의 불신을 초래했고 소련측의 제한적인 경제협력노력마저 무위로 돌아가게 했다. 71년의 테 땅트 출발후인 73년부터의 경제개혁<sup>(1)</sup>이 성과없이 끝

(1) 생산연합체(Production Association) 운동으로 대변되는 개혁의 주요내용은 복잡한 소련산업체계 및 이에 관련된 다층적 행정 위계구조를 보다 체계화·단

난 70년대 말 이후 경제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브레즈네프에게 권력의 기반을 조성해 주었던 서방파의 테랑트마저 종식되면서 政敵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와중에서 1982년 11월 11일 소련정부는 70년 초이래 국내개혁과 테랑트를 주도해온 브레즈네프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브레즈네프의 죽음은 초기에 활력이 넘쳤던 그러나 곧 병약속에 침몰되어 간 안드로포프와 처음부터 병고에 시달리다 간 체르넨코에 의해 승계되어졌다. 이들은 실제 개혁면에서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브레즈네프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제3의 인물인 고르바초프를 기다려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형태로 태동되게 되었다.

## VII. 고르바초프하의 소련 공산주의

### —뻬레스트로이카는 혁명인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등장을 계기로 시작된 뼈레스트로이카는 소련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혁명적 변혁을 몰고 온 중심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재편, 재구성, 재건, 개혁 등의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뼈레스트로이카는 고르바초프에 의해 「혁명」 또는 「혁명적 변화」로 정의되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등 전분야에 걸친 변혁을 몰고 왔다. 뼈레스트로이카의 배경은 무엇보다 먼저 중앙집중주의의 비능률성, 냉전적 군비경쟁 등에 따른 경제침체이다. 스탈린에 의해 왜곡된 허울좋은 사회주의적 가치에 대항해 그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보다 탈이념적·산업화 중심적인 신세대의 등장과 압력 역시 하나의 원인이다. 뼈레스트로이카 자체가 하나의 요소로 성립된 동·서의 실태랑트 역시 개혁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이같은 배경 하에 뼈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적 이념보다는 인민의 실생활에, 제국주의에 대항한 투쟁보다는 화해와 협력, 인류보편가치에 주안점을 두면서 왜곡되고 억압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명실공히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뻬레스트로이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먼저 1986년 2월 제27차 당대회를 전후로한 전통적 규율강화, 노동력 보존에 의

---

순화시켜 산업전반의 효율성·전문성,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었다. 자세한 것은拙著, 『新蘇聯政治論』(博英社, 1987), p.201. 참조.

한 생산성 향상 및 농업개혁등을 통한 개혁의 준비단계이다. 1985년 5월의 음주단속법과 7월의 농촌노동력 보존에 관한 법령 등이 그것이다. 당대회를 계기로 뼈레스트로이카 노선이 채택되어 실천단계로 옮겨졌으나 기존의 타 성에 의한 관료층의 저항에 직면하여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채 1987년 1월의 중앙위 총회까지는 선전, 선동의 수준에 머물렀다. 1987년 1월 총회이래 경제, 정치, 사회, 언론, 사법 등 전 분야에 걸쳐 비판의 캠페인이 공개와 민주화의 이름으로 전개되면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편작업이 보다 확고히 정착되어 갔다. 1987년 1월의 신임금기금법, 합작기업법, 대외무역기구 정비, 5월의 사기업법 및 1988년 1월의 국가기업법 실시 등이 그것이다. 이들과 관련한 경제재편의 주요내용은 생산과정에서의 물질적 인센티브의 도입, 선거제 도입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통제강화, 생산단위의 자율성 확대 및 민주집중주의의 확립이다. 경제체제 개혁은 1987년 6월 총회에서의 「경제관리의 근본적 재편」에 관한 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보다 구체화 되었다. 경제재편의 총체적 노력에 이어 1988년 6월의 제19차 특별당대회를 계기로 정치체제 개혁이 뒤따르게 되었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 1) 형식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던 소비에트의 권한강화 및 활성화와 이에 따른 당지위의 상대적 약화 ; 2) 소비에트 의장의 겸직 및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인사개편에 따른 고르바초프 실권강화 ; 3)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서의 축소적 통폐합에 의한 지방행정기구의 자율성 및 권한·능률의 확대 등이다. 정치개혁의 주된 목적은 경제를 관료제의 부담과 지배로부터 구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자발성을 중앙통제의 장점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1986년이래 「새로운 사고」<sup>(2)</sup>에 바탕한 대외정책노선이 가시화되면서 1986년 7월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 1988년 9월의 크拉斯노야尔斯크 협정 등으로 대표되는 新아·태노선이 정착되었다. 군축과 협력 증대에 의한 중국, 일본, 한국 등을 주축으로 한 역내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평화가 그것이다. 동·서간의 테당트가 정착되면서 1987년 12월 유럽에서의 중거리핵(INF)폐기문제가

(2) 「새로운 사고」는 다음의 배경에 의해 태동된 것으로 주장된다 : 1) 소련이 서방 측과 더 이상의 군비경쟁에 의해 불필요하게 자원낭비를 할 여력이 없다 ; 2) 서구에서의 과학, 기술혁명 ; 3) 동·서 핵경쟁이 갖는 지구적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 ; 4) 미국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소련 지도층의 인식변화 ; 5) 소련의 제3세계, 동유럽정치의 실패에 대한 반성 ; 6)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른 개혁주의의 우세화.

타결되었고, 동유럽에 대한 불개입, 자율허용 및 개혁지원이 선언되어 통독과 유럽질서체계의 계기를 만들었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군철수 및 캄보디아문제의 정치적 타결은 제3세계에 있어서도 소련이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외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경제문제는 더욱 악화의 길로 치달았고, 급기야는 1989년 말과 1990년 초 우랄지방의 스베르들로프스크(Sverdlovsk)市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생활고에 시달린 대노동자 파업사태가 나타났다. 중앙집중의 완화에 따른 국가적 기강해이는 발틱 3국에 의해 대표되는 민족분리주의운동을 초래하여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 와중에서 강·온파간의 대립이 격심해졌다. 이에따라 소련은 1990년 3월 인민대표자 대회를 통해 고르바초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권한을 강화시킨 동시에 당의 지도적 역할의 포기를 규정한 헌법개정안을 채택한 뒤, 1990년 7월의 28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구조를 개편했다. 다당제가 채택되어 사회·정치적 다원주의가 공식적으로 협용되었으며 소비에트와 내각이 활성화되면서 당, 소비에트, 내각의 관계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방적 정치구조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않으며 침체, 혼란 무질서만이 증폭되면서 고르바초프는 대중과 보수파, 급진파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인기저하와 함께 보다 급진적 개혁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 와중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한 성격논쟁이 일게 되었는 바, 그의 개혁이 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는가에 대해 소련내 급진파와 서방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 1. 관료주의와의 야합과 대중적 저항

고르바초프가 개혁의 과정에서 그의 개혁은 무력화시키는 소련의 철옹성 같은 관료주의를 공격해 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 그 자체와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점.

### 2. 시장요소에 대한 이해부족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또는 몰이해에 의해 개혁은 언제나 「사회주의적 과자에 자본주의적 아이스크림」을 얻는 셈(Desai, 1989:53)의 미봉책에 그치게 되었다는 점.

### 3. 레닌주의에로의 회귀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개혁을 레닌주의의 틀내로 국한시킴으로써 개혁의 진정한 혁명성을 희석화 시킨점등이다.

이들 문제점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구호와는 달리 혁명성이 아닌 점진주의에 머물게 함으로써 개혁이 성과없이 인민들의 고통만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비판된다. 그러나 현재의 개혁에 따른 문제점들이 고르바초프 개혁이 갖는 이같은 점진주의에 의해 초래되는 것만은 아니며, 그것은 소련체제가 지니고 있는 자체적 성격에 의해서도 한계지워지고 있다. 지적한바 있는 전통적인 러시아 권위주의와 민주화간의 충돌이다. 이는 민주화과정에서 중앙권위 약화와 상대적 지방공화국들의 목소리증대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망국적 민족분리주의에 의해 잘 대변된다. 개혁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이 자본, 기술의 공여와 관련한 서방적 지원여부에 있는 것. 역시 고르바초프가 처한 딜레마이다. 이른바 개혁의 서방의존성이다. 현재 동유럽의 변혁이 빼레스트로이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에 반해, 소련의 개혁은 이제 동유럽으로부터 역유입되고 있는 모습으로 엘친과의 제휴아래 급진적 시장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움직임이 서방에서 주장되는 바와는 달리 결코 사회주의의 포기는 아니며, 사회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키 위한 우회적 편법으로 주장된다. 개혁의 전망과 관련해서, 왜곡된 사회주의의 타성에 젖어 있는 대중의 인식전환의 한계, 보수적 관료주의의 극복의 어려움, 민주적 경험의 부재, 민족분리주의의 지속 등에 의해 상당히 오랜기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련의 개혁은 이제 더이상 소련자체의 문제가 아닌, 세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의한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인류보편가치와 직결되는 것인 한 서방적 관심과 지원이 잇따라야 할 것이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소련인민의 열망과 세계의 관심이 지속되는 한 빼레스트로이카의 장래는 고통속에서도 낙관의 요소가 크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소련의 개혁은 과거에 의해 한계되어지는 속에서도 고르바초프와 소련인민에 의한 진정한 열의에 의해 새롭게 규정되어질 그러한 성격의 것으로 요약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가이어, 디트리히  
 1990 「러시아혁명」, 이인호 옮김, 새길.
- 레온하르트, 볼프강  
 1987 「마르크스주의 政治理論」, 유창선·박정주 옮김, 청아.
- 맥렐런, 레이비드  
 1986 「마르크스주의 論爭史」, 안택원 옮김, 인간사랑.
- 호스킹, 제프리  
 1988 「蘇聯史」, 김영석 옮김, 흥의사.
- Arbatov, G.A.  
 1979 "Detente and the Problem of Conflict," *Social Science* 3.
- Auty, P.  
 1970 *Tito*. New York: McGraw Hill.
- Desai, P.  
 1989 *Perestroika in Perspectiv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edrich, Carl & Zbigniew Brzezinski  
 1956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ugh, J.F. & M. Fainsod  
 1979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man, Marshall I.  
 1987 *Gorbachev's Challeng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Keep, J.L.H.  
 1976 *The Russian Revolution: a Study in Mass Mobilization*. London: Weidenfeld & Nicolson.
- Lenin, V.I.  
 1929 *State and Revolution*. N.Y.: Vanguard Press.
- 1960~1966a *Collected Works XXIII*. Moscow: Progress.
- 1960~1966b *Collected Works XXVII*. Moscow: Progress.
- Marx, Karl  
 1986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in *Karl Marx &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